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강원외고는 ‘강원의 자산’	1
江原日報	02면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착공	2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착공 "북한과 대화·협력 기원"	2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강원권 통일+ 센터 착공식	3
강원도민일보	16면	양구 양록장학회 정기총회	4
江原日報	16면	2023년 양록장학회 정기총회	4
江原日報		[포토뉴스] 2023년 양록장학회 정기총회	5
강원도민일보	03면	뉴질랜드 비상운영센터 강원 접목 사례 논의	6
江原日報	03면	“재난안전센터홀 시스템 도청 신축 시 구축해야”	6
노컷뉴스	온라인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재난안전센터 홀, 도입 시급"	7
CBS	온라인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재난안전센터 홀, 도입 시급"	8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신축 도청에 재난안전센터 홀 운영 필요"	9
KBS 춘천	온라인	발전소 많은 영동지역...전기요금 인하될까?	10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2023년 제16회 삼척 농업인대학 입학식	11
江原日報	14면	농업인대학 입학식	11
江原日報	21면	[동정] 김기철 강원도의원(정선)	12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김기철(정선) 도의원	1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김기철 도의원	12
江原日報	21면	“그린바이오 거점도시 우뚝 ... 미래산업 주도하는 강원도”	13
江原日報	15면	“평창 동계청소년올림픽 동참 지원 감사”	14
江原日報	01면	김 지사 "30일 특별도 지원위서 반전 이뤄낼 것"	15
KBS 춘천	온라인	강원자치도법 개정 ‘험난’ ... ‘신중 검토’ 다수	16
江原日報	02면	반도체연구소 유치 ‘강원대-경북대’ 양자대결	17
江原日報	22면	‘저임금·환경 열악’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절실	18
강원도민일보	10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개발 행정절차 속도 주목	19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청 제2청사 조직안 내달 초 발표, 시군 공무원 전입 확대 ...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반쪽 특별자치도' 안 된다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1월 착공 차질 없어야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23년째 동결된 예금보호액 상향할 때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단독주택 98개월 만에 하락, 부작용 막을 대책은	23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오피니언 19면

2006년 여름은 참으로 더웠다. 그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한 것은 강원외고 유치전 때문이었다. 양록학원으로 결정되면서 지금까지도 도내 유일의 자립형 외고인 강원외고는 양구의 품에 안겨

강원포럼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차를 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감은 '3월까지 교육부가 지정 취소를 하지 않고'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현 교육부의 '교육개혁개편안'에서 외고 존치로 발표된다면

왔다. 치열했던 유치전에서 도민이 한결같이 염원했던 바는 우리 지역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수인재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소외된 강원도를 고향사랑 마음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가난하지만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 부모님의 자화상이 투영된 것이었다.

이렇듯 강원외고는 누구 하나의 전유물이 아닌 양구군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의 자산이었다. 2010년 3월 개교한 강원외고는 지금까지 1,

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소위 SKY대학에 272명을 진학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수목적고'로서 강원외고는 지금까지 도민과 양구군민의 바람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앞으로로도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농어촌자율고'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술술 나오더니 급기야는 교육부 '특목고지정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지정 취소 심의를 기다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필자가 단언컨대, 농어촌자율학교는 그냥 일반고의 유형 중 하나이고 외고 지정 취소 이후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된다

고 해도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2025년부터 전국 단위 모집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표적인 농어촌자율학교인 공주 한일고나 남해 해성고와 같은 경쟁력을 가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더욱이 '2023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다도 100위 안에 든 농어촌자율학교는 그나마 전국

더 이상 농어촌자율학교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가 4월로 미뤄지면서 교육부 내 '특목고지정심의위원회'가 먼저 개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필자가 알아본 바 현 교육부는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사실상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어에 능숙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외국어 인재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지

금까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리적 근거였던 외국어고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72시간 외국어 전문교과 커리큘럼을 줄일 수 있고 일정 부분 이과계열의 우수인재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동시에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시금 촉구하고자 한다. 양구군민을 포함한 도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보완하면서 교육부의 교육개혁정책 발표를 지켜본 후 강원외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동안의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발휘되길 염원한다.

강원외고는 '강원의 자산'

단위 모집 중인 6개 학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사고와 과고, 외고와 같은 특목고뿐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 시 양구군 내 일반고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양구군 조례로 설립된 '글로벌장학회'와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동반 폐지, 인구 유입 효과 미미 등 졸속 추진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필자는 3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사실상 일반고인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신경호 도교육감에게 질의했고 졸속 추진되는 지정 취소 절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착공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착공식이 27일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허영 국회의원,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창우 춘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8일 (화)
종합 04면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착공 “북한과 대화·협력 기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축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착공한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와 관련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강원도민들과 함께 나누며 통일 시대, 강원도의 도약을 약속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춘천에서 열린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착공식에서 이주태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접경지역이자 분단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강원도가 갖는 의미가 가장 특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화 통일이 이뤄지는 그날, 통일 잠재력을 지닌 곳이 바로 강원도”라며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탈북민들과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과 통합의 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장관은 북한에 재차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응하



강원권 통일센터 착공식이 27일 춘천시 삼천동 현지에서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허영 국회의원,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창우 춘천부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황유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 공모사업을 통해 인천, 호남에 이어 3번째로, 옛 중도관리사무소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3807㎡ 부지에 연면적 1597㎡로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이날 착공

식에는 이주태 실장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허영 국회의원, 이창우 춘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권 장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 공동주최로 연구원에서 열린 'DMZ포럼'에 참석해 “통일부와 강원도, DMZ 접경지역 중심 그린데탕트 사업을 추진하면 강원도는 물론 남북한에 모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북측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정치

[포토뉴스] 강원권 통일+센터 착공식



강원권 통일+센터 착공식이 27일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허영 국회의원, 이창우 춘천부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권 통일+센터 착공식이 27일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허영 국회의원, 이창우 춘천부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권 통일+센터 착공식이 27일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허영 국회의원, 이창우 춘천부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8일 (화)
지역 16면



양구 양록장학회 정기총회 2023년 양록장학회 정기총회가 27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선묵 군부의장과 군의원, 장학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지역 16면



2023년 양록장학회 정기총회 2023년 양록장학회 정기총회가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선묵 군의회 부의장, 장학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7일 (월)
사회

[포토뉴스] 2023년 양록장학회 정기총회



2023년 양록장학회 정기총회가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군수와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김선묵 부의장 및 군의원, 장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8일 (화)
종합 03면

뉴질랜드 비상운영센터 강원 접목 사례 논의

도의회 안전위, 해외 정책사례 탐방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가 지난 2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재난구호과를 방문한 가운데 비상운영센터 강원도 접목 등의 사례를 연구했다.

위원들은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후 만들어진 비상운영센터 홀에서 간담을 진행하며 이같은 공간의

필요성을 강원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원도청 신청사 설계시, 소방본부, 산림청(산불대응담당), 재난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등 부서간 회의가 가능한 ‘재난안전센터홀’의 설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위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에 방문해 재난대응, 소방정책, 도시재생 등 정책 사례를 탐방한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가 지난 2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재난구호과를 방문한 가운데 비상운영센터 강원도 접목 등의 사례를 연구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종합 03면

“재난안전센터홀 시스템

도청 신축 시 구축해야”

도의회 뉴질랜드 방식 제안

강원도의회가 “대형 재난이 빈번한 강원도 지형 특성에 따라 도청 신축 시 재난안전센터홀 시스템 구축을 반영하도록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재난구호과를 찾아 재난 대비 주요 정책과 운영 체계를 살피고 지역 접목 방안을 연구했다.

이번 간담은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이후 만들어진 비상운영센터홀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의 부서 간 신속한 회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호주, 뉴질랜드로 국외공무출장을 떠나 재난대응, 소방정책, 도시재생, 대중교통 등의 제도와 시책을 살핀다.

정윤희기자 jyh89@kwnews.co.kr

노컷뉴스

2023년 03월 27일 (월)
사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재난안전센터 홀, 도입 시급"

핵심요약

뉴질랜드 국외 연수 중 '비상운영센터 홀' 주목
유관기관 신속한 회의, 대응 가능 시스템 구축
박기영 위원장 "도청 신속시 재난안전센터 홀 운영해야"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비상운영센터홀을 찾아 운영 방식과 효과 등을 점검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호주, 뉴질랜드의 재난 대응 정책을 배우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외연수를 진행하는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박기영 위원장)가 재난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고 신속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재난안전센터 홀(Hall)'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재난구호과(Civil Defence Emergency)를 방문해 재난대비 주요 정책, 운영 체계 등을 듣고 비교분석을 통한 강원도정에 적용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이후 만들어진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re) 홀을 거론하며 "이곳은 재난발생시 재난안전과 관련된 소방, 경찰 등의 부서간 신속한 회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으로 "새로 짓는 강원도청에도 소방본부, 산림청(산불대응담당), 재난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부서간 신속한 회의가 가능한 '재난안전센터 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강원도는 지형 특성상 대형산불,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센터 홀' 시스템 구축을 강원도청 신속시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

2023년 03월 27일 (월)
강원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재난안전센터 홀, 도입 시급"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뉴질랜드 국외 연수 중 '비상운영센터 홀' 주목
유관기관 신속한 회의, 대응 가능 시스템 구축
박기영 위원장 "도청 신속시 재난안전센터 홀 운영해야"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비상운영센터홀을 찾아 운영 방식과 효과 등을 점검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호주, 뉴질랜드의 재난 대응 정책을 배우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외연수를 진행하는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박기영 위원장)가 재난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고 신속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재난안전센터 홀(Hall)'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재난구호과(Civil Defence Emergency)를 방문해 재난대비 주요 정책, 운영 체계 등을 듣고 비교분석을 통한 강원도정에 접목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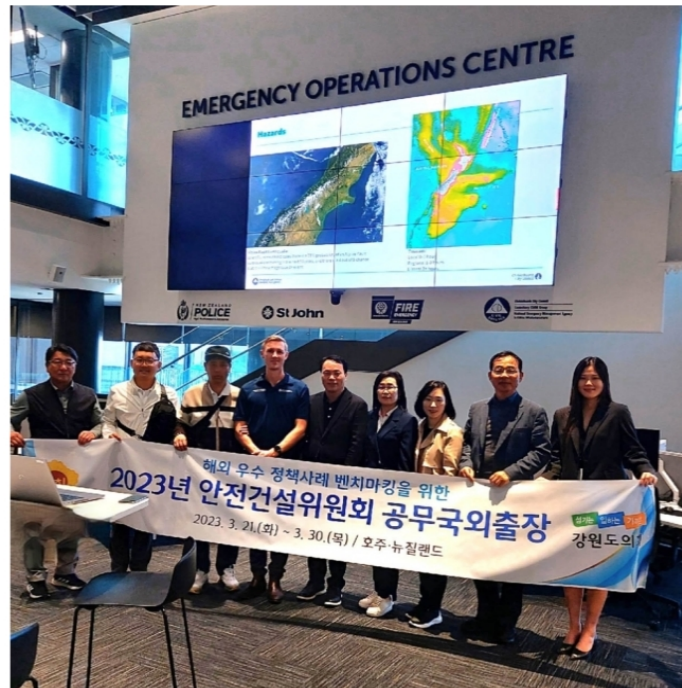
특히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이후 만들어진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re) 홀을 거론하며 "이곳은 재난발생시 재난안전과 관련된 소방, 경찰 등의 부서간 신속한 회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으로 "새로 짓는 강원도청에도 소방본부, 산림청(산불대응담당), 재난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부서간 신속한 회의가 가능한 '재난안전센터 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강원도는 지형 특성상 대형산불,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센터 홀' 시스템 구축을 강원도청 신속시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도의회 "신축 도청에 재난안전센터 홀 운영 필요"

관계 기관 신속 협업 가능한 뉴질랜드 사례 벤치마킹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재난 재해가 빈번한 지형 특성상 도청 신축 시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센터 홀' 구축을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겠다"라고 27일 밝혔다.

안전위는 최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재난구호과를 방문해 재난 대비 주요 정책과 운영 체계 등을 살피고, 비교분석을 통해 강원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담회는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이후 만들어진 비상운영센터 홀에서 이뤄졌다.

비상운영센터 홀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 등 부서 간 신속한 회의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살핀 의원들은 도청 신청사에도 소방본부, 산림청 산불대응담당 부서, 도청 재난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등 부서 간 신속한 회의가 가능한 '재난안전센터 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1일 뉴질랜드와 호주로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난 안전위는 30일까지 재난 대응, 소방 정책, 도시재생, 대중교통과 관련한 제도와 시책을 비교·분석해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기타 아주경제, 매일일보 등 50개 언론사 보도

발전소 많은 영동지역...전기요금 인하될까?



[앵커]

지역별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발전소가 많은 영동지역도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가능할 전망인데,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에서는 동해안 화력발전소 6곳을 비롯해 모두 13곳의 대형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발전소를 통해 지난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력은 3만 천2백여 기가와트시, 서울에서 생산된 전력의 7배를 넘어섭니다.

반면, 전력 사용량은 서울의 36%에 불과합니다.

전력 자급률은 서울이 8.2%, 경기도가 56.2%인데, 강원도는 무려 180.2%로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결국, 강원도는 필요한 양보다 배에 가까운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전국이 모두 동일합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상황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에서도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을 인하여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수영/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가 본회의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상반기 중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일단은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부 보상이 될 수 있는 데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재석/강원도의회 의원 : "영동지방이 (전기요금) 좀 싸다고 하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전력 다소비 업종인데 그런 업체를 유치하기 쉬울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애기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국회의원 수도 많은 수도권 지역 여론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관련 법안이 자칫 신규 발전소의 비수도권 건설의 또 다른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조연주

江原日報

2023년 03월 27일 (월)
사회

[포토뉴스] 2023년 제16회 삼척 농업인대학 입학식



2023년 제16회 삼척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27일 삼척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박상수 시장, 정정순 시의장과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입학생 51명, 농업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삼척 농업인대학은 사과심화과정 29명과 딸기과정 22명 등 2개 과정 51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전문기술 이론 및 현장학습 교육 등 과정별로 17차례 70시간 운영한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지역 14면



농업인대학 입학식 2023년 제16회 삼척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27일 삼척농업기술센터에서 박상수 시장과 정정순 시의장,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입학생 51명, 농업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인물동정 21면

◇김기철강원도의원(정선)



은 28일 오후 1시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 타워에서 개최되는 정선로컬써밋 한일컨퍼런스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8일 (화)
인물동정 14면



김기철(정선) 도의원은 28일 오후 1시 정선군하

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 타워에서 열리는 정선로컬써밋 한일컨퍼런스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동정] 김기철 도의원

김기철 도의원(정선)은 28일 오후 1시 하이원그랜드호텔컨벤션타워에서 개최되는 정선로컬써밋 한일컨퍼런스에 참석.

2023년 03월 27일 (월)
종합

“그린바이오 거점도시 우뚝 ... 미래산업 주도하는 강원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평창에서 출범했다.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소재를 개발하는 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평창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경북, 대전, 충북, 경남, 제주 등 전국 7개 지자체와 정부부처,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발족식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활용한 우수 사례 발표와 특강 및 정부 산업 육성 전

평창서 농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산업발전 협의회’ 발족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산업발전 협의회 발족식이 27일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경북, 대전, 충북, 경남, 제주 등 전국 7개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략 토론이 이어졌다.

정황근 장관은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6대 분야, 6개 거점지역을 선

정했고 그린바이오 캠퍼스도 3개를 만들었다”며 “그린바이오 산업은 세계 속으로 클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

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도시이며 미래산업의 가장 유력한 분야가 그린바이오 산업이다. 강원도는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임정빈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은 “협의회 발족을 통해 세계 속의 그린바이오 메카가 되는 것은 물론 그린바이오 산업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서울대 평창캠퍼스가 앞으로 미래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게 되는 역사적 순간인 듯 하다”며 “평창군도 세계적 그린바이오 거점도시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실현시켜 가겠다”고 했다. 평창=조상원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지역 15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평창군 용평면사무소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평창군 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평창 동계청소년올림픽 동참 지원 감사”

김 지사-군사회단체 간담회

【평창】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7일 평창 용평면사무소에서 이창영 평창군변영회장 등 평창군 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동참 및 지원 의지를 밝힌 평창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평창군사회단체는 지난 23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보이콧을 철회했다.

김진태 지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평창군민들께서 동계올림픽 유산과 강원 동계스포츠의 지속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큰 결단을 해주셨다”며 “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약속해 주신 만큼 강원도에서도 평창군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할 방법을 다각도

로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지역 변영회장들은 “3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먼저 평창을 중심으로 동계스포츠 관련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둘째 올림픽 유산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평창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매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문화행사도 평창에서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평창군,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평창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마련 및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상원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종합 01면

김 지사 “30일 특별도 지원위서 반전 이뤄낼 것”

강원특별법 규제 해소에 난색 표하는 정부 설득 강조

29일 삼성전자 사장 면담 예정 ... 반도체산업 향방 촉각

속보=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는 30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본보 지난 20일자 1면 등 보도)를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강원특별법이 개정된 지 5개월 만에 지원위원회가 열린다. 힘들게 첫 회의가 마련된 만큼 특별 자치도를 추진하는데 반전의 계기로 삼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고 공개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면서 “1차 고비인 행정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보면 아직까지 종전의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고 대통령의 자치분권 철학에 대한 (부처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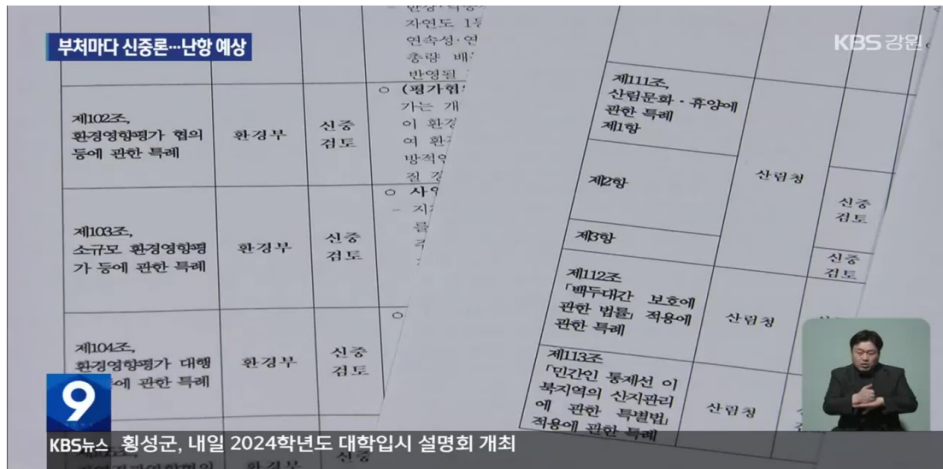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체 무엇인지,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각 부처에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의 지원이)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농지, 국방, 산림,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가 있고, 강원도민들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 눈앞에 있는데 정부 부처가 반대해 빈 껍데기만 나오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며 작심 비판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원도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특별 자치도 추진 상황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와 김진태 지사는 회의 이후 춘천 더존비즈온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29일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관련 면담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도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삼성 측의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을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면담 당시 의미있는 얘기가 있었다”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확장될 것이며 확장 시 원주를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자치도법 개정 '험난'... '신중 검토' 다수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자치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이게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 지방자치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의회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44명.

이를 5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신중한 검토'입니다.

현재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가 강원도보다 많은 곳은 전국에서 5곳뿐으로, 다들 강원도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 강원도에 특례를 줄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간 인구 편차 기준을 벗어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자치도법 개정안의 법조문은 137개.

이에 대해, 국회가 취합한 정부 각 부처의 검토 의견을 보면, 줄줄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 특례, 농지분야의 규제 특례에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놓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의 반대 의견이라는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강원도에 대한 특례는 정부의 권한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고, 중앙 부처들도 좀 자세의 변환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주로 예정된 국무총리 주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만나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종합 02면

반도체연구소 유치 ‘강원대-경북대’ 양자대결

강원 접근성·교육센터 보유 등 강점... 정부 이르면 내달 말 최종 발표

속보=정부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의 핵심인 국책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본보 지난 6일자 4면 보도)가 27일 마감되며 본격적인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

비수도권 전국 4개 권역에 지역 국립대를 거점으로 1곳씩 설립될 예정으로 강원도는 대구·경북과 한 권역에 묶여 강원대와 경북대 간 피할 수 없는 경쟁을 벌이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를 마감했다.

강원대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춘천시 공동으로 이번 공모에 도전했다. 경쟁 상대는 경북대다. 정부는 전

남, 전북, 광주를 I 권역, 제주, 경남, 부산, 울산을 II 권역, 강원, 경북, 대구를 III 권역, 충남, 충북, 대전을 IV 권역으로 묶고 권역별 1곳씩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자격을 갖춘 곳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안동대, 금오공대 등 5곳이지만 강원대와 경북대만이 공모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객관적으로는 강원도가 ‘언더독’이라는 평가다. 경북대는 삼성전자와 연계한 계약학과인 모바일공학부를 운영 중이며 구미를 비롯해 나쁨의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반면 강원도와 강원대는 수도권 및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우수한 접근성,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지자체의 강한 지원 의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한 후 4월 한 달간 현장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 또는 5월 초 최종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와 연계해 반도체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내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강원도는 공모 선정 시 춘천시와 함께 지방비 164억원을 매칭해 총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문화 22면

‘저임금·환경 열악’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절실



도사회서비스원 실태 분석 종사자 54% “임금수준 낮다”

강원도 노인 돌봄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125만원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노인 돌봄 자원을 고려해 춘천·동해시와 인제·화천군의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강원도 노인 돌봄 종사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업무 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월평균 임금에 대해 만족하는 질문에 ‘적다’ 53.9%, ‘매우 적다’ 12.2%로 전체의 66.1%에 달하는 응답자가 업무 부담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도 노인 1인 가구는 도 전체 가구

의 11.4%로, 노인 인구의 22.3%에 달한다. 특히 심신 기능에 제약이 있는 노인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약화, 건강상의 문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돌봄 영역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2020년 노인맞춤돌봄사업을 통해 노인 돌봄의 영역을 통합·재편했지만, 여전히 돌봄 영역의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 돌봄 생활지원사 A씨는 “주 5회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며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의 수가 17명 이상인 생활지원사도 있다고 들었다. 일은 일대로 하는데 돈은 그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는 2030년 31.6%, 2040

년 41.4%, 2050년에는 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으나 생활지원사 1명이 케어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권고 범위 내인 16명을 넘어 10명 중 1명은 17명 이상을 돌보고 있다. 특히 종사자 중 14.4%는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의 중증 돌봄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옥 도사회서비스원 책임연구위원은 “노인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성 있는 인력이 유입돼 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를 어르신이 누릴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8일 (화)
지역 10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개발 행정절차 속도 주목

시·가평군, 도·경기도 지적 보완
강촌 활성화·관광객 견인 실현 관심

속보=춘천시와 가평군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개발사업을 추진(본지 2022년 11월 15일자 9면) 중인 가운데 두 도시 모두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최근 강원도에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앞서 춘천시와 가평군은 지난 2019년부터 공동으로 남이섬~강촌구곡폭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사업을 추진, 강원도와 경기도에 각각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심사 결과 두 지역 모두 보완 요청이 내려졌다. 춘천의 경우 강촌리 일대 관광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는 옛 강촌역 인근 건물을 이용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지난 달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이 일대에 관광식당도 지정했다. 가평군도 제출한 도면을 지목별로 구분해 다시 작성하라는 내용을 보완하고 관광식당을 지정해 경기도에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이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

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 없는 거리 조성,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춘천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강촌 일원을 다시 활성화하고 남이섬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강촌과 도심지까지 끌

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요청, 내달 중으로 회신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문체부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8일 (화)
종합 02면

도청 제2청사 조직안 내달 초 발표, 시군 공무원 전입 확대 추진

속보=오는 7월 강릉에 개소하는 강원도청 제2청사(본지 3월 21일자 2면)를 놓고 조직 등 세부안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최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최종안은 4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청 제2청사 근무와 관련, 시·군 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각 기초지자체 전입 인원 규모가 주목된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도청 2청사 개청을 위한 조직개편안 등 세부안을 조율 중에 있다. 당초, 주중 조직개편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해 발표가 미뤄지게 됐다.

2청사는 강원도 글로벌본부 형태로 우선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도청 일부

국(局)이 강원도립대 청운관에 임시 입주하게 된다. 2청사 주요기능은 해양·수산업무를 중심으로 수산업·신소재 등 영동권 특화산업과 관광분야에 맞춰져 있다. 규모는 도환동해본부 포함해 1단계로 340여명 정도로 꾸려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8일 (화)
사설/칼럼 19면

‘반쪽 특별자치도’ 안 된다

-정부부처, 권한이양 신중... 전향적 태도 기대-

정부 부처들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 부개정안의 각종 특례에 대해 부정적 인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심의 과정에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30 일에는 특별자치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 정부 설득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의 특례 관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한 이양 의지입니다. 강원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본지가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례 조항별 정부부처 입장은 신중 검토 35건, 수정 수용 3건, 일부 수용 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수 특례 조항을 ‘신중 검토’로 분류했다는 것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의 이런 시각을 총 137개 본 조항 및 6개 부칙 조항에 반영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부처가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놓은 특례 조항 중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

치로 꼽히는 자치 조직권과 4대 규제(환경·산림·군사·농업)혁신 특례 조항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정부 각 부처 장관 등의 고유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특례 내용에 대해서도, 기타 현행 법률안 및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부부처의 이같은 입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본질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과 조직·인사에 관한 자율성 확보는 자치분권의 핵심입니다. 또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특례는, 지역 발전 동력을 만드는 필수 조건입니다. 분권의 가치를 담은 주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강원도는 허울뿐인 ‘반쪽 특별자치도’에 머물 것입니다. 법안은 오랫동안 ‘거미줄 규제’로 개발에 소외됐던 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지역과의 균형만 앞세운다면 특별자치도는 출범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와 도 정치권은 핵심 특례를 법안에 담기 위해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사설/칼럼 19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1월 착공 차질 없어야

4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올 11월에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대표 공약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진태 지사도 이 사업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정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국비 확보 제1호 사업으로 정한 김 지사는 “사업을 서둘러 진행, 2026년부터 운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대청봉 왼쪽 봉우리인 끝청 사이 3.5km 구간에 들어선다. 사업이 거론된 것은 1982년부터다. 양양군 차원에서 설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2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이 번번

이 무산됐다. 이제 오색케이블카는 더 이상 미뤄선 곤란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강원도 사업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올 5월로 예정돼 있다. 남은 11개 인허가 과정 중 가장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양양군은 이미 강원도에 신청서를 냈으며 도 차원의 보완을 거쳐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일정은 4월 신청 후 행안부가 8월부터 심사를 벌여 10~11월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5개월이나 일정을 앞당겼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금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 이후 강원도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자리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카 운영 방안도 수립돼야 한다.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대시설, 즉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 그리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한 소규모 가족·연인 단위를 콘셉트로 차별화된 코스, 프로그램 등이 발굴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국에서 최고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산, 바다, 호수를 통해 파괴해진 도시인들

이 자연 치유와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길, 호수, 계곡, 바다, 힐링여행을 테마로 관광지와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

또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대규모 관광개

발 사업을 통해 읍·면과 연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한다. 그만큼 경제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동해안을 따라 브랜드의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도 통하는 관광벨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유수의 관광지는 기본적으로 해변을 끼고 있다. 강원도는 이미 오랜 기간 국민에게 숙박 관광지 선호도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앞두고 강원도 관광의 경쟁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때다.

40년 강원도 숙원 사업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마지막 관문 지방재정투자심사 5월 예정

지역 관광 경쟁력에 대한 전반적 점검할 때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8일 (화)
사설/칼럼 19면

23년째 동결된 예금보호액 상향할 때

-GDP 2배 증가 금융불안 잠재우고 실효성 높여야

미국발 은행 파산 소식 등이 금융 불안정에 미칠 파급을 주시하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도액 상향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3월 24일 발의됐습니다. 예금액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곧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체 대출금 관련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법 제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량예금인출 사태를 차단하는 등 안정성 유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지급 최대액이 23년째 5000만원으로 동결돼오면서 당초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에 비해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배 이상 증가했

습니다. 5000만원을 넘어서는 은행 예금 비율은 2017년 61%에 달했고, 작년엔 65%로 더 늘어 무려 1152조 7000억원 규모입니다. 강원도내에서도 신용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예금액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확대된 경제 규모와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스위스에서는 예금자 신뢰 확보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호 한도액을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지급 시점도 파산 3개월 이후였던 것을 20일로 크게 단축함으로써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후 긴급 임시 조치였던 것을 법률로 제도화함으로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주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것으로 여기면 예치금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동시다발적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기관에 예치한 경우도 서둘러 인출하면 금융시장은 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불안 심리를 사전 차단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려면 소비자 보호에 철저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최대 한도액 상향에 따른 여파를 면밀히 따져야 하겠지만, 23년째 동결해온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금융당국은 불합리 해소에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8일 (화)

사설/칼럼 19면

단독주택 98개월 만에 하락, 부작용 막을 대책은

강원도 내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전국 주택시장의 등락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 온 강원도 내 단독주택 가격이 8년2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월 도내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3% 낮아졌다. 2014년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도내 단독주택 매매가는 무려 8년2개월, 9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거래량이 줄어든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도내 단독·다가구 거래건수는 지난달 237건에 불과해 거래가 활발하던 2022년 8월(422건)보다 43.8% 감소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을 포함하는 단독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늦다. 하지만 다시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걱정이다. 더욱이 도내 아파트 거래시장의 침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1분기(3월24일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거래량 5,021건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친다.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

다. 도내 시장의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유동성 잔치로 불릴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동반 급락은 문제다. 집값의 급등락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주택은 가구 자산의 70~80%에 이를 만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 하락은 지역민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린다. 주택건설 관련 업종의 경기 부진으로 지역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가뜩이나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던 주택시장은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냉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 주택 관련 지표의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주택담보대출 정책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지원 등을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차제에 조사·결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안도 고심해 볼 때다.